

목회·설교에서 AI 사용률, 2년 새 3배 이상 '급증'

만족도는 55%... "사역 보조 '코파일럿' 역할"
설교문 작성 44%만 '적절'... 활용 범위에선 인식 차
성도들 "목상·찬양 등 상황 맞춤 신앙 콘텐츠 원해"
목회자·성도 모두 "행정·회계 영역에 AI 활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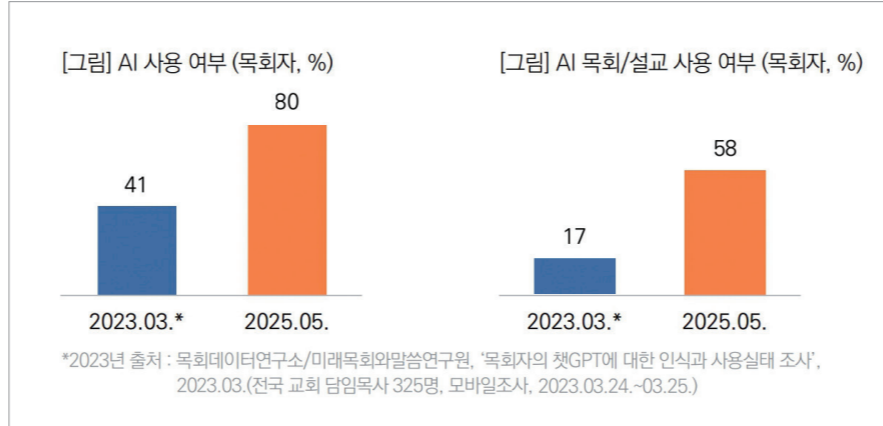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교 준비 과정에서의 활용은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대연)가 최근 발표한 '넘버즈 329호'에 따르면, 목회·설교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목회자 비율은 2023년 17%에서 2025년 58%로 41%포인트 증가했다. 2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현재는 담임목사의 절반 이상이 AI를 실제 사역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활용 영역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AI

사용 경험이 있는 목회자 중 81%는 '설교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설교문 작성, 성경공부 준비, 기도문 작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목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활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목회자 55%가 '만족한다(매우+어느 정도)'고 응답해, 아직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교 준비 과정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목회데이터연구소

인식도 항목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설교 예하나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목회자 93%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반면 '설교문 작성에 대해서는 44%만이 적절하다고 답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AI 활용 전망에 있어서, 목회자의

절반 이상인 52%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4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목대연은 "잘만 가까이의 목회자가 AI를 단순한 유행이 아닌, 향후 사역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도

구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성도들은 가장 이용하고 싶은 AI 콘텐츠로 '상황에 맞는 목상과 찬양 콘텐츠 제공'(34%)을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신앙 상태에 따른 성경공부 안내(28%), '나에게 맞는 설교 추천'(22%) 순이었다.

목대연은 "성도들은 AI를 자신의 현재 영적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 맞춤형 영적 가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교회 내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분야로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 '교회 행정 전산화(목회자 64%, 성도 61%)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회계 및 예산 관리(목회자 42%, 성도 49%)도 공동 2순위였다.

두 그룹 모두 설교 등 핵심 사역 외 업무 부담을 주는 '행정, 회계' 업무 영역의 효율화를 위해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목대연은 덧붙였다.

었다.

목대연은 "AI는 항공기의 '코파일럿(부조종사)'과 같이 목회자의 사역을 보조하는 도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조사와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목회자가 말씀 준비와 목양에 더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 영성 훈련을 통해 기술 오남용에 따른 '영적 사고력 저하'를 경계해야 한다"며 "AI가 제공하는 매끄러운 문장과 방대한 정보가 목회자의 치열한 신학적 연구와 고찰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목대연과 희망친구기아대책이 담임목사 500명과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실시한 것이다.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했다. 김진영 기자

태여연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입법 공백 속 생명 보호 외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 태여연)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낙태 허용 확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배숙 의원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11일 결정 이후 현재까지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입법 공백 상태가 7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국회는 이 결정 취지에 따라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키는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낙태의 근거가 아니라 국가 지원의 근거야 한다"며 "소득 부족, 학업 및 경력 문제, 혼인 외 임신 등은 결코 생명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태아를 희생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임신 주수 제한 삭제, 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국가의 근본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낙태 허용 확대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편리한 낙태를 권리로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생명 존중이 약화된 사회는 결국 국가 존립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36주 만삭 태아 살해 사건'과 같은 비극은 생명 경시 풍조가 낳은 참혹한 결과"라며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기 임신부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보호출산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낙태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낙태가 아닌 사회적제도적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 확대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보호출산제 등을 통한 위기 임신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태의 건강보험 적용 등 생명 보호하라는 국가의 근본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들은 "저출산과 생명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계가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성명 말미에서 "태아의 생명은 타협할 수 없는 인권의 출발점"이라며 "사회적 어려움을 이유로 생명 포기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유 발언으로 정지영(이화여자

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교수)는 "임신 5~6주면 초음파에서 심장 박동이 확인되며,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며 "생명을 상황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는 매우 모호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낙태 허용이 아니라 임신부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낙태는 출혈, 감염 등 합병증 위험이 있으며 임신 주수가 늘수록 위험이 커진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라비(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 위원대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생명의 가치를 상황에 따라 상대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어려움은 복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생명을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산모(두 아이의 엄마)는 "생명의 가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원칙"이라며 "낙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기자회견에 참석한 발원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여연

태가 위위질수록 책임은 여성에게 더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예진(리브라이트 대표)은 "생명을 살리려는 의료진은 처벌받고,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는 권리로 포장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입법 공백 속에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의료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승민(산부인과 간호사-조산사 원장)은 "의료인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적 윤리를 지니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강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의료인의 양심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요한(청년 발원자)은 "낙태 문제는 여성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남성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책임이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구조를 통해 생명과 공동체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구 기자

인공지능 시대, 교회와 신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 4면

브릿지문화토크, 여행스 케치 리더 '루카' 초청 >> 24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로/코팅액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